

日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국내서 ‘소금’ 사재기 조짐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녹아내린 핵연료 식히는데 사용
 이르면 내달 방류...방사능 검사 강화 등 대책마련에 분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된 물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시켜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해안 1km 바깥의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방류 시점은 이르면 7월이 될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동해를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일본 측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에 각종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수산물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부에선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 등을 사재기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산물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횡집이나 초밥집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카페에서는 “소금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달 초부터 도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소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모도 몇 톤 정도가 아니라 소금 창고 전체를 계약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최근 “소금 3가마를 사왔다”며 “방류가 확정되면 다섯 가마 정도 더 사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회는 물론이고 수산물도 노르웨이산 등 외국산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소금 업체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제염을 생산·판매하는 한주소금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망으로 인한 영향은 없지만,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식품업계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동원그룹은 이미 올해 초부터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방사능 분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원은 원재료 및 완제품의 검사 항목을 2배 늘렸고, 분기별 1회 또는 연 1회였던 검사 주기 역시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

아울러 공인 기관인 내부 식품안전센터와 더불어 외부 공인기관까지 투트랙으로 검사 기관에 대한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대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산 식품이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산 소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암염이나 호수염을 대체제로 사용하거나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 수산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

유통 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수산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확산하면 수산물 매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마트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 매출에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실제로 방류될 경우 수산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부터 수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업마다 방사능 검사 강화 및 대체제 마련 등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라



(사진 =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고 전했다. 변용일기자

제9회 무안 황토갯벌 축제
 2023. 6.9.(금)~6.11.(일) 무안황토갯벌랜드 축제
 The 9th Muan Red clay Tidal flat Festival
 무안군/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

광주 택시요금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인상

중형택시 3300원→4300원으로
 모범·대형승용 3900원→5100원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앞서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2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10일 업계·시민·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을 마련했다.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광주·전남 대학 ‘1000원 아침밥’ 종료

40개교 중 11개교 평균 4000원 식사 제공...2학기 확대할 방침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1000원 아침밥’이 1학기 종료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호평이 이어짐에 따라 2학기에는 확대할 방침이다.

6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광주·전남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1000원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은 40개교 중 11개교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대, 남부대, 호남대, 조선대 등 6개교이며 전남은 목포대, 전남과학대, 순천대, 청암대, 동신대 등 5개교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교는 정부로부터 1000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조선대는 학교예산 2000원·지역소재기업 후원 2000원·학생 1000원 등으로 5000원짜리 도시락을 마련해 매일 160개, 오는 19일까지 4800개를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1000원 아침밥이 학생들의 인기를 끌면서 2학기에는 확대 방침을 세우고 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후원기업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지난 2015년 1000원 아침밥을 가장 먼저 시행한 전남대도 2학기부터 아침 식단을 4000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학생 1000원과 대학 1000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000원, 광주·전남도 1000원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대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1000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이용 학생은 지난 2018년 4만7000명, 2019년 3만8000여명, 코로나19 시기 제한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평균 2만5000여명, 올해 3월~5월 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1000원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는 동신대와 광주여대, 호남대 등도 6월 중순께 1학기 사업을 종료하고 방학기간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해 2학기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대학은 등록금 동결·학생수 감소 등의 여파로 내년부터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끊길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자칫 중단될 수 있다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1000원 지원에도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일부는 자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동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